

셀트리온, 시세조정 혐의 조사

금융당국, 자사주식 매입과정 파악중 ... 꾀씸죄로 낙인 추측

금융당국이 셀트리온(대표 서정진)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셀트리온과 일부 소액주주들의 자사주식 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모임은 4월 금융당국의 공매도 세력에 대한 무대응을 비판하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 주식매매 관련 심리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심리자료를 넘긴 것은 서정진 회장이 4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지분을 전액 외국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기 한참 전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년에 걸쳐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왔다는 셀트리온의 주장에 따라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이 자사주식 매입을 통해 시세조종에 나섰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 2012년 5월 무상증자 하루 전에 자사주식 매입 공시를 낸 것을 두고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지 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무상증자 직전에 자사주식을 매입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며, 무상증자 추진과정에서 서정진 회장과 금전 거래가 있는 일부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파악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소액주주가 대표로 있는 관련기업은 셀트리온 계열사에 500억원 정도를 대출해준 채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여러 차례 자사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해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어떠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년에 걸쳐 셀트리온을 공격한 불법 공매도 세력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등에 나섰던 셀트리온 관계자 모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서정진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에 불만을 품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탄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을 꾀씸죄로 찍고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9>